

제370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8월1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2.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3.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백승주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광대훈 · 광상도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현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점식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2
 2.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촉구 결의안(이수혁 · 이해찬 · 이석현 · 원혜영 · 박병석 · 추미애 · 김부겸 · 송영길 · 심재권 · 박정 의원 발의) 2
 3.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2

(13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윤상현 위원장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국회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지정한 제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대성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정혜인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3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북아

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상정 및 결의안 채택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을 오늘 상정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성일중·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욱·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점식·정중섭·정진석·정태욱·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2.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촉구 결의안(이수혁·이해찬·이석현·원혜영·박병석·추미애·김부겸·송영길·심재권·박정 의원 발의)

3.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

항 이수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2항은 제안설명, 대체토론 등 심사절차를 거쳐야지만 결의안 채택 시급성과 적시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간의 합의로 작성한 의사일정 제3항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수혁 위원님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 그리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대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영공 침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

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군사 지형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로 관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결의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 결의하는 이 결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내용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짐작은 했겠지만 어쨌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러시아의 영공 침범,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안에서의 연합훈련 그리고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에서는 두 달 사이에 세 번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것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입장을 발표를 하는 등 사실상의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탄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본도 이러한 결의안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빠지고 자신들의 그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보면서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고 말하자면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결의안을 보고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의 이런 직접적인 위협을 규탄하지도 않고 또 자제를 촉구하지도 않고 그냥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합니다.

차라리 같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빼고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던 국방부도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이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또는 그것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위반입니다.

육해공 어느 곳에서든지 남북한은 서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를 해 놓고 엄연한 적대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에 빠진 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군사합의를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결의안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제를 촉구하고 또 경고도 함께해야 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사합의를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다릅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협상력을 더 강화하고 높여 주게 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러한 결의안에 북한을 규탄하는 더 강력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이 오히려 정부에게 많은 룬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다시 어떤 평화를 깨고, 대화를 깨고 대결 구도로 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더 깊숙이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에서 추가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아마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을 무제한 드리기는 또 본회의 일정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한 5분씩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석현, 유기준, 이수혁 위원님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은 북한에서 그게 신형 방사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단거리 미사일인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조금 나가서 이것이 실패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죠?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신형 방사포 실험을 한 거다라고 북한 방송에 나온, 어제 나왔지요? 그이후로 우리 국방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 아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성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또. 그래서 실은 방사포인지 단거리 미사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물론 방사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제재와 연결해서 볼 때 그 위협의 정도는 그것보다는 작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뒤에나 그런 것을 채택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을 뭐라고 해야 되겠는가, 그런 막연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오늘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유기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기준 위원 오늘 촉구 결의안을 보면 제목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라고 말은 붙였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또 그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특정을 해서 한국의 주권에 대해 침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역내 안정 위협 행위라 하면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이것을 채택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묘하게도 관련돼 있는 나라들이 중국·러시아·일본, 또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가장 강대국인 나라들이고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한들 이 나라들이 과연 얼마만큼 경청을 할지 그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서 큰소리 내지만 밖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을 보고 집안통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그다음에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누가 기울여주고 이러려면 외교적 노력이 같이 선행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지난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

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연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일에 이런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다, 구두선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동조해 주는 나라가 있어야만 이 결의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외교적 노력이 반드시 선행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우리가 강동 6주를 찾아올 때 서희의 외교적 노력을 자꾸 인용을 하면서 문제인 대통령이 서희에 비교된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서희가 그렇게 할 때는 그 당시 국제정세가 송나라와 요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서 그런 국제정세를 잘 활용을 해서 강동 6주를 찾아오는 외교적 성과를 얻었던 것이지 지금같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의안만 채택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동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채택은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외교적 노력도 같이 선행이 되면서 또 같이 노력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 외통위의 대안, 3개의 이미 제출된 결의안을 통합·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당의 안 중에 북한 미사일실험 한 것을 포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의 출발점은, 물론 우리도 다 공감을 하고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7월 29일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이 KADIZ 무단 침입과 독도 영공 침범 그 사실을 규탄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실험 또는 방사포실험 등이 있었는데 그 2개를, 북한 행위하고 지금 중국·러시아·일본의 행위를 같이 섞으면 포인트가, 초점이 2개로 흩어지는 우려가 있어서 본래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중국·러시아·일본을 규탄하고 유감 표명하는 것은 이

결의안으로 하고 대신 북한의 일련의 행위,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든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국방위에 한국당이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국방위가 일단 이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대안을 낼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결의안을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방위에 일단 한국당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를 심의해야 될지, 그것은 또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될 문제겠지만 하여튼 한국당의 공동발의로 국방위가 이 문제를 심의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북한 미사일 또는 방사포 이 문제를 놓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안을 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는 제외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무성 위원 이수혁 간사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간사가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합의 과정은 이수혁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한을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이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또 북한의 위협은 상시적인 것이고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약간 완화된 표현으로 한미안보태세 강화 이런 내용의 취지를 담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무성 위원 그 논의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북한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 있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어디에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무성 위원 아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 내지는 중단을 촉구하는 그 내용을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과 별개로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우리 외통위에서요?

○김무성 위원 우리 외통위에서 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

으로 있지 않았는데 하여튼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상시적이고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태를 봐서 다음에 또 할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지요.

○**김무성 위원** 미사일 몇 방 더 맞고 난 뒤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또 국방위에도 하고 있으니……

○**김무성 위원** 넣어야 돼요, 이것.

○**이수혁 위원** 국방위에 지금 공동발의돼 있으니……

○**송영길 위원** 이의 없으니까 통과합시다.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예, 정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양석 위원** 이 결의안은 당초에 자유한국당이 먼저 냈습니다. 7월 24일 날 냈고 자유한국당의 결의안은 소위 행위자를 명시하면서, 중국·러시아·일본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7월 30 날 냈고 오늘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거치면서 제목은 좀 두루뭉술한, 그리고 행위자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민주당 측안으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안이, 우리가 외통위에서 토론할 때면 북한의 미사일에 관해서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나 아니냐고 늘 토론했던 우리 위원회인데 이런 타이밍에 굳이 상임위를 구분해 가면서 놓치고 그랬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리고 원래 KADIZ 침공에 대해서 굳이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국방위 소관이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또 우리가 맡으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은 국방위로 굳이 하자는 게 너무 궁색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왕에 합의한 5번 항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이런 모호한 표현이 왜 나오니까? 차라리 그런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문항 대신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런 말도 못 합니까? 현안들이 지금, 벌써 발사돼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은 뭐 하시냐고 다들 이려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국회가 모처럼 여야가 합의안 내면서 그런 것 하나 인색하고 또 상임위를 나누고 한다는 게 얼마나

궁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항 하나 촉구 하고 하는 것이 여야 간에 그렇게 입장 차이가 큰 것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회의가 한두 시간, 또 오늘 예결위 때문에 늦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 우리가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지금 이 정도 가면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사 간 합의도 필요하고 또 각 당의 의견 조율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송영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송영길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그러면 송 위원님 발언하고 잠시 정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우리 양 간사님들이 앞으로 상임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 여야 위원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각 정부의 우리 주권, 영공 침범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일본 건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을 텐데 논쟁이 안 되도록 간사들께서 합의를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별도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다 우리가 국가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결의안의 취지가 많이 퇴색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결의안이 여야 간에 합의된 이유도, 일단 3항을 보면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한다는 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인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요미우리 사설을 보게 되면, 요미우리 사설이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러시아 폭격기와 중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영해를 침공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이 독도가 다케시마로 자기들의 영토인데 왜 월권을 해서 요격을 했느냐고 비판하는 사설을 요미우리가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가 우리 독도 영공을, KADIZ를 침공한 것이 오히려 미국 국방부장관이 ‘한국 영공을 침공했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오히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공인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천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을 넣지 않는 이유는 북한도 우리 입장에

동요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북한을 같이 집어넣으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북도 같이 동의하고 있는 마당에 메시지가 혼란이 될 수가 있고.

5번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닌오위다오, 지금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질문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장관한테. 과연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일본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안보조약 대상으로 센카쿠 열도를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미국의 입장은 센카쿠 열도, 닌오위다오의 소유권이 중국인지 일본인지 미국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태의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을 중국 해군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장군이 뭐라고 그때 질문했느냐 하면 ‘그런 논리라면 미국은 독도도 마찬가지로 독도가 한국 영토이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현 상황을 변경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입장인가’ 이렇게 인민해방군 장성이 미 국방부장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인민군, 여자 장군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게 질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 영토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결의안의 3번과 5번은, 사실상 이번에 미국 측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의 영공 침공 사건을 계기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북측의 그러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통일부가 서로 역할 분담해서 가는 것이 상임위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휴회해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는 모습은 이 결의안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사 간에 좀 의논도 하고 각 당

간의 입장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고 하시려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조금 이따 하시지요.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양석 위원님.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최근에 여야가 모처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하는 규탄 결의안을 냈고 오늘은 또 KADIZ 침공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일본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최근에 발사한 소위 발사체 미사일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만큼 이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장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ADIZ 침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NSC 소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때마다 NSC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한 만큼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KADIZ 침공보다 미사일 발사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위협이 크기 때문에 이 차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요건 그러니까 이 사안을 분리하는 게 좋고 또 KADIZ 침공과 혼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의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해 왔고 앞으로도 있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데 우리가 뜻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수혁 간사님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확인해 주시는 선에서 이 문제는 또 여야가 함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아무튼 이 엄중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수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수혁 위원** 정양석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들을 다시 정양석 위원님이 정리해 주셨다고 봅니다. 두 사안을 서로 혼합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고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면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또는 장사포 실험 등에 관해서는 여당에서 이미 국방위에 결의안을 공동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데 저희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할 그럴 입장은 전연 없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KADIZ와 독도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오늘 이대로 채택을 해 주시고 북한 미사일 문제는 분석들이 다르고, 북한의 주장과 우리의 분석이 초기분석과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과정도 보면서, 그렇지만 너무 또 시일을 끌지 않고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어쨌든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반영되고 조정될 것으로 보고 또 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가 합의해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3항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결의안은 그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경**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석 위원**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현지에서 종료됐고요. 아직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단히 개요만 소개 말씀을 올리면 우리 측은 8월 2일 날 일본에서 화이트리

스트 제외하는 결정을 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한일관계는 정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철회·중지 촉구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일 측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고노 외상의 워딩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가 구체적인 워딩까지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진석 위원** 내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귀결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장직무대리,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석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내일 그런 일이 결과가 될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수혁** 간사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일본의 보복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간사단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손을 들)

○**위원장대리 이수혁**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차관님,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방콕에 가서 원래 일본 외상하고도 의논을 하기로 했지만 또 미국 장관하고도 의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미는 8월 2일 날, 오늘이 아니고 내일……

○**유기준 위원** 내일 만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직 만나지 않았나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한미일 외상이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내일 강경화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시요, 만나고 그다음에 같이 한미일 또 만나는 그런 걸 연속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 두 가지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일본의 각의가 내일 결정하는데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우리 시간으로 10시인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품목이 세 가지 정도에 그쳐서 그 효과가,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어 가지고 영향이 굉장히 큰데 만일에 전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면 전체 품목은 제가 알기로 천백몇 가지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그런 게 될 텐데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90일간의 심사를 거쳐서 수출을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이미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돼 있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으면서도 그 제도를 포지티브하게 운영해서 수출심사를 거의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수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역에 있어서 상당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만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텐데 당장, 그때 대책을 마련한 것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체제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어쨌든 일본에서 수입하는 의존 폭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당장 될 수 있을까요?

산업에 미치는 전체적인 큰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내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게 된 이후에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구체적인 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보다 산자부가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0개 이상의 품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1200개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1184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1200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다만 1200에 가까운 순자가 있지만 그중에는 저희들이 일본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지 않은 품목도 있고요 또 대체 가능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산자부에서 그런 중복 계산된 것을 다 빼고 하면 상당히 좁혀진 숫자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마 내일 산자부가 그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1200보다는 적은 숫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 여부에 수출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과 불확실성이 초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게 하루아침에 대체되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대책과 중기대책 이렇게 분리를 해서 또 내일 발표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또 실지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일본의 상품을 불매한다든지 또 일본에 가는 관광객을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자제를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GSOMIA 파기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사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과거사 문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물론 일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현재까지 미치고 그 현재로 인해 가지고 미래까지 영향이 가는 것은 결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전 세계,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까운 미국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고, 지난번 특사를 보내라고 했는데도 지금 특사를…… 갔다는 보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사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특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들은 바가 없어서……

○**유기준 위원** 예를 들면 특사를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못 미치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그로 인한 불편,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어서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건데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것만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들도 그러한 조치들이 심리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사실 외교 채널도 접촉이 원활하지 않았습다라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경제산업성 채널은 지금 거의 가동이 안 됩니다라는 외교부 채널은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8월 2일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8월 2일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기에 수습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도록 해 주세요. 지금 당장 피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조세영 차관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한일 장관회담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딱딱한 태도로 나온 모양인데 참고로 지금 화이트리스트 적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뿐입니까, 다른 나라들도 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희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만 적용을 받았던 거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으로서도 앞으로 두 달 정도만 지나도 시급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반도체 소재 만들고 삼성 또 SK 또 LG 같은 데서 일본 소재 갖다가 제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분업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미국은 우리 반도체 갖다가 아마존, 애플, 델 이런 회사들이 전자제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장에 애플 거기도 우리 거 갖다가 핸드폰 만들었는데 지난달인가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갔잖

아요, 애플이. 왜 방문했겠어요? 자기들도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도체 물량이 충분히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자기들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감잡한 상황에 놓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1100개 항목에 대해서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미국을 비롯해서 중재할 가능성은 상당히 깊다고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았다. 일본도 요청하면 내가 중재하겠다’라고 말한 건 중재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한 걸 보면, 그래서 미국 중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일본한테는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더구나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할 것으로 보는데, 외교부에서 전망할 때는 미국 중재가 얼마나 있어야 착수를 할 것 같은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위원님, 어제 사이에 미국 언론하고 일본 언론에서 미국 쪽에서 어떤 중재안을 냈다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그런 제안이 없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글썄,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없었던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중재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라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두 동맹국 간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이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은지는 않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지금 좀처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하나 더,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하던 그런 소재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식시장처럼 미리 예측에 동물적 본능으로 예민한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볼 때 이것

을 우리가 극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직접 매달릴 게 아니라 특히 우리 국회 같으면 주변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아시아 여러 나라,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을 설득해서 여론화하는 게 필요하다 보고. 또 외교부도 한편으로는 일본과 회담을 촉구하면서, 그런 연관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나라들의 불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제여론화해서 일본을 몰아붙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금 저희들이 외국과 외국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한 57개국 정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그런 설득 노력은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대로 그게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한일 외교부장관 회동에서 특별한 성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말씀 올렸지만 아직 정확한 정무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회의에 오면서 아주 간략한 개요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를 뭐라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 말고 더 나아진 점이 있다고 하는 점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는 제가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동안에 외교부가 접촉하기를 바랐는데 실무접촉에서는 성과가 없었고 어제께 국회의원 방문단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별 성과가 없었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외교부장관들 회담에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도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주목을 했었고. 그런데 차라리 안 만나고, 말하자면 미루어 놔다라고 한다면 여지가 있고 기대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의 여지라도 있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만나 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이 깨 버렸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다 기대를, 그다음에는 무엇에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 기대를 해야 되지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위원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8월 2일 결정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했었고요.

다 말씀 올린 대로 일본 입장이 완고하고 강경해서,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는 미국의 그런 설득 노력에도 지금 좀처럼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일본으로서는 8월 2일 날 강행하겠다 하는 입장이 강한 것 같고요.

○이정현 위원 8월 2일 날이라고 그래 봤자 오늘이 8월 1일인데 이제 몇 시간 남아 있는 8월 2일을 자꾸 들먹이면 국민들은 자꾸 실망만 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 뒤로 행사만 해 가지고 그 이벤트 지나고 나도 아무 결과 없이 또 넘어가면 그때마다 국민들의 실망 강도는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불안감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보복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앞전에 첫 번째 했던 보복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의 경우에 내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이 각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다냐, 이게 진짜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것 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뭐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는 게 더 큰 것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

금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다 리스트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나 있을 것으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대비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상이라기보다는 지금 드러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내일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절차를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것 말고 또 그 뒤에 닥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각오도 하고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아, 국민들한테는 안 알렸다 손치더라도 닥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면 산업 분야에 해당 기업들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암시라도 하고 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무역전쟁이니까 전쟁에서는 중요한 것이 보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알린다 손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예측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현장에서 통보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 등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가능성은 경제적인 겁니까, 그 밖에 다른 것도 포함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경제적인 것 이외의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주로 어떤, 분야로 크게 얘기한다면 어떤 분야가 될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글썽요, 경제 이외에 인적 교류나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이정현 위원 인적 교류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지만 혹시라도 비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본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비자에 대해서 더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따라서 그런 것도 경제 이외의 분야에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이정현 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750만이 가고 250만이 온다면 1년에 1000만 명, 비행기 4만 2500대 이상이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적 교류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단교 아닙니까? 외교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단교까지는 아닐지라도 단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습니다, 인적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쪽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것을 행동에 옮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 산업 분야에 대한 것 말고 금융 분야에 대해 그런 입수된 정보라든가 또 가능성도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금융 분야에서도 직접 정부 간에 이야기가 된 바는 없고요 다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금융도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금융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의 대책회의에서도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떤 대결이든 대결에 있어서도 최고·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뒤만 따라갈 겁니까? 우리 카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도 그것이 결정되고 실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올린 대로 대책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또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대책회의는 청와대 안보실 중심입니까, 총리실의 특위 중심입니까 아니면 외교부 내에 별도의 상황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입장을 얘기하고 정작 대통령님께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남북 문제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국정을 주도해 오셨던 안보실도 요즘에는 거의 말씀이 없으시고, 외교부는 우리가 솔직히 봐서 제대로 정보도 안 준 것도 같고 발언권도 안 준 것 같고 회의에 꺼준 것 같지도 않은데 외교부가 나서서 지금 와서 하는데 성과는 별로 이렇게, 장관회답에서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국민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주로 어디서 이런 대책회의를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대책회의는 지금 상당히 많은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해도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도 있고요 또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도 국무차장이 주재하는 TF가 있고요,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TF도 있고 경제부총리가 하는 대책회의도 따로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분야별 대책회의가 있다면 그것을 종합해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서로 연관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일차적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말씀 올린 그런 실장급 채널을 통해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진행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브리핑을 국무총리실에서 좀 일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각자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서 산업부 무슨 실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각기 따로 얘기를 하고 산업통상부에서 따로 얘기를 하고. 지금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결과는 하나도 없는데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하는 그런 채널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유념을 해서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직도 없다는 것 자체도 정말 그냥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우려스러운 얘기를 넘어서 희한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고가 덮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하는 기관조차도 없고 종합적으로 브리핑하는 곳도 없다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 우리가 대책을 내세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는 지소미아에 대한 검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그냥 말하자면 관병은 별로 믿을 바가 못 되고 지금 별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의병이 나서는 이런 형국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책이 이 두 가지라니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는 이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확실하게 깊이 검토까지 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소미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본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일본의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어떤 면에서 일본에 타격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정보교류를 일본이 더 많이 의존합니까, 북한 관계를 두고 우리가 더 많이 의존을 합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조치 취하고 있는 것을 물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지소미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일본의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었고요, 그런 면에서 일본도 그것이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미국은 우려하고 염려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이 나서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지 사실 일본에다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소미아 협정 자체는 각자의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고요. 어느 쪽이 얼마나 더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국방부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대국답지 않은, 큰 나라답지 않은 정말 아주 썩질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이런, 무역전쟁에 이용을 하는데 그 무역전쟁의 맞대응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지소미아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맨날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을 카

드로 쓴다는 것을 왜 검토를 했지요, 이 부분은?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가 보기에는 그 단초는 일본이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설명을 했던 것이 아마 촉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직도 특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특사는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특사를 보내서 수습이 될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특사는 검토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경제적인 그런 공격이 말하자면 보복, ‘이것은 보복도 아니다. 시작도 안 했다’……

○**추미애 위원** 무제한입니까? 무제한입니까?

○**이정현 위원** ‘또 굉장히 초보적인 그러한 거였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닥칠 그러한 일본의 본격적인 정치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좀 외교부를 믿어 달라. 정부를 믿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갖고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아마 만일 내일 일본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 범정부적으로 입장을 즉 설명을 드릴 그런 수순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언제쯤 우리가 하게 됩니까, 정부의 입장을? 내일 만약에 각의에서 통과된다면?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가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본에서 그런 결정이 있으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발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회의할 때 질의시간을 정하지 않아 가지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질의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김무성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미애 위원님 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분씩 하면 25분으로 해서 30분 안에 회의를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무성 위원** 조 차관, 반도체수출이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략물자가 1200여 개라고 하지만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 단 한 품목이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금지를 하면 반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렇잖아요.

아베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내건 요구조건이 있잖아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일본 측은 지금,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이 수출통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하는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것은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내건 요구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솔직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를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일본은 표면적으로 연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강제징용 문제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위원** 강제징용 문제 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정하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다음 단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가 포항지원에 신청 제출한 포항제철의 지분, 신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압류신청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김무성 위원** 그게 9월 중순에 결정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압류결정이 되면, 그것을 지금 중지시켜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해 달라,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무성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압류집행이 안 되도록 그것을 빨리 한국 정부에서 중단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알기 쉽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일본 정부가 그런 절차를 중단하라는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무성 위원** 모든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상 그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얘기입니다.

○**김무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부 내에서 또는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다 쓸데없는 말들만 지금 많이 늘어놓고 있단 말이지. 국민들 듣기에 혼란만 오고, 무슨 1200개 다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 아니라고요. 우선 3개 품목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3개 품목 이야기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공갈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태국이 가지고 일본 장관 만나고 미국 중재를 요청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 문제를 많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서 저희가 지난달에 일본 측에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 고민의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 고민의 주체는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정부의 누가 해야 돼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 외교부도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도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결국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문제지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심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하게 되면 엄청

나게 큰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 설득해 가지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대통령이 내 가지고 아베를 만나서 빨리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반일감정 부추기고 싸움 붙어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할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은 최종 이 문제 마무리하고 협상하고 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서야 될 선수입니다, 대표입니다. 자극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지소미아 파기할 것을 검토하겠다’, 외교부장관이 그런 말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이십니다.

○**정양석 위원** 차관님,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소위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에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좀 다른데요, 2017년 경우가 좀 많았다고 들었고요, 10건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요, 10건 넘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양석 위원** 그런데 어느 쪽에 더 이익이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을 현재 어느 쪽에 더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양석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양석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외교부가, 외교부장관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적어도 지극히 비외교적인 그런 발언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소미아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런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국내정치 논리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외교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국 외무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언론에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발언

이 뭐냐 하면 ‘일본이 변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이 변한 게 없다’ 이러겠지요. 지금 외교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내적 절차의 타당성, 국내정치의 기초하에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발짝 양보할 그런 대안도 없으면서 일본이 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그게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무역보복이 시작됐을 때 왜 미국을 쫓아갔습니까? 왜 미국을 다녀갔어요? 미국이 나서서 중재하든지 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일본이 부인했지만 양국의, 우리는 압류 자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중지하도록 하는 중재안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도 상상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절차는 타당하고 일본은 잘못됐고 그런 논리로 간다면 왜 외교부장관이 만남니까? 산업부장관이 만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절차적 타당성, 국내정치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되고 무역보복이 되면 피해를 우리가 입는다.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로 외교적인 노력일진대 아직도 외교부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내정치에 이렇게 되고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일성입니다.

모두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안 만난 것만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에 외교부장관이 만나서 타협의 실마리는 없고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 이것 정말 잘하는 일이나.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다른 나라에 아웃리치한다고 그러셨지요? 소위 여론전 펼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본 앞설 수 있어요? 정말 일본에,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각 나라가 다 옳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외교적 능력이나 노력이 일본을 앞설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교부가 그런 측면에서 자꾸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국 국민 간의 골이 깊어지는 비외교적인 행태, 이런 것은 정말 다른 부처도 아니고 외교부는 나서서 막아야 된다.

산업부 관계자들이 제네바 갔다 와서 큰소리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 부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시 만나야 될, 또 외교적

으로 풀어야 될 외교부가 이런 국내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비외교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언론들이 많이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양보할 카드도 없으면서 일본만 변하기를 바라고 안 변했기 때문에 성토하고 이것은 지극히 옳바르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전문가이신데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국내 정치 논리, 또 청와대로부터 또 다른 각도를 가지고 외교부가 주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뭘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외교부가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제안도 했었고 또 그 제안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본 쪽이 저희보다 조금 더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2010년 9월에 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간의 선박이 충돌해서 중국 어선이 침몰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박병석 위원 그때 중국은 희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제재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때 제소의 주된 이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제한은 국제적 공급망을 흔들고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한다’. ‘국제적 공급망을 흔들고’, 즉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이지요. ‘흔들고 국제적 안정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습공격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사전에 선포하지 않았습시다. 1894년 청일전쟁 시대에도 선포고 없이 청나라를 쳤고요. 1904년 러일전쟁 시절에도 선포고 없이 러시아를 쳤고 1941년 진주만 기습공격도 전혀 사전에 예고 없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도발은 바로 사전예고 없는 또 하나의 기습공격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견해가 있으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이번에 일본이 취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이 외교적으로 보통 사전 통보라든지 하는 게 있는 법인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만약에 일본이 국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을 때 우리도 막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들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많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카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도 상응하는 맞대응 카드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면서 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큰 대중전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 지금 상당한 개입의 의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호응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박병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더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대중전략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일본을 어떻게든지 설득해라 하는 요구를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된 다거나 장기화되면 소위 세계적 공급망,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지요. 바로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휴렛팩커드

라든가 하는 것이 직접 타격이 오면 그 영향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 그리고 그 IT제품을 쓰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한일 당사자들의 관계지만 사실상 국제적 전체의 세계적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아웃리치(outreach) 노력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지 않았지만 또 만약 내일 화이트리스트가 정말로 배제가 된다면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 10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우리는 즉각 총리실 주재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총리 또는 국조실장이 주재하는 10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큰 회의가 있었고 국조실장 또는 제1차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가 십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리고 그 TF팀에는 지금 얘기하는 외교·안보적 문제의 위원회가 있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또 분과위원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박병석 위원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노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뜻이고 또 일정 수준까지는 국제적 여론이나 또는 일본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는 아직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요.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 일본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서 머무르지 않고 언제 또 다른 기습공격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양국 또는 전 세계의 경제 또는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3의 조치가 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부와 정치권과 기업들이, 경제가가 한 팀이 되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의 일치된 목소리, 그리고 상당히 엄중한 상황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야·언론·기업·정부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에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협상력에 상당한 파워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저의 의견에 대한 차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 차관님, 지금 한국·일본이 경제 전쟁을 대판 붙는데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승자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서로 타격이라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 서로 상처를 입는 거고 서로 패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외교 목표도 작금의 한일 경제 분쟁을 조속히 수습하는 게 우리 외교 목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진석 위원** 그러면 수습을 하려면 수습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협상을 통해서 수습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진석 위원** 다른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면, 그러면 수습안과 협상안이 있어야 될 건데 그 안의 골자는 결국 강제징용 문제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진석 위원** 강제징용 문제지요. 그런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교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 얘기 나온 1 플러

스 1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세계 3위 경제대국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대립을 하면 이것은 결국 국제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거고 피해 정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standstill agreement) 얘기가 어저께 로이터보도에 나왔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라는 게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냉각기를 갖는, 분쟁을 중단하자 그런 이야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우선 현상 노력을 하고……

○**정진석 위원** 그런 협정을 한일 간에 맺으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는 언론에 난 것은 사실 협정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어떤 합의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달 전에 냉각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 사안이 원래, 우리는 과거사 문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난해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좀 냉각기를 갖자고 해서 제가 사실 한일분쟁 동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 달 전에 한일분쟁 동결론을 제시했는데, 미국발 뉴스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싸움을 말리고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차원에서의 냉각기를 갖자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진석 위원** ARF에서 내일 한미일 삼국 외교부장관이 만나면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글썄, 구체적으로 그런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가 나오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동결하면서, 또 시간을 가지고 대화해서 해법을 찾는다 그것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해법의 골자는 강제징용 문제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후

속조치들, 예를 들어서 일본 자산의 매각 현금화 하는 것이 되느냐 이것이 중단되느냐가 키포인트 같아요. 이것이 만일 예상대로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금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현금화도 결국은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부로서는 그러한 사법과정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엇그저께 강 장관님 답변 중에 원고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마치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직간접적인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저도 답변을 기억합니다만 강 장관께서 답변을 한 취지는 결국 민사재판이고 원고의 의사, 원고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고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차원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는 행정부가 그 절차에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진석 위원 물론이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다만 저희가 원 플러스 원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것도 그것이 사법절차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석 위원 어쨌든 한미일이 닦치고 있는 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인 상상력, 정치·외교적인 해법의 창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내일 ARF 한미일 외교장관 회

담이 이루어진다면 시점이 백색국가 제외 결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시차도 있고 또 일본 측이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한 10시경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뒤……

○정진석 위원 3국 외교장관회담은……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 뒤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 뒤가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진석 위원 그 결과를 보고 만나게 되는 거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얼핏 들은 정보로는 우리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것 같더라는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칼을 제대로 한번 휘두르겠다는 것이거든요.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마비시킬 뉘 이런 것까지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이미 수출 규제하고 있는 3개 품목 중에 일부가 아마 배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정진석 위원 결국 우리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며칠 전에 보수신문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내보냈어요.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국 법원의 판결을……

○추미애 위원 ‘한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존중하나 배상금은 한국에서 해결해야 된다’, 좀 달라진 거예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로 바뀐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저는, 외교적 상상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도 역시 국민주권에서 나온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주권인 것이고 사법주권의 근본은 국민주권인 거지요. 그래서 주권자인 개

인의, 일본의 불법행위, 강제징용행위로 인한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사법주권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행정부나 외교부가 쉽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성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 전제 아래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런 일본의 터무니없는 경제보복 또 우리의 산업 피해 이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칙하에서 이걸 갖고 가야 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국내 정치, 국내의 반일감정에 의존한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한 일본이 이 복잡한 무역보복 문제를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이른바 아베 내각의 개헌론에 자꾸 연동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기도, 이것도 우리는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3자가 말하듯이 양비론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추미애 위원 이것은 명백히 반인권적인 국제법 위반이었던 것이고 그 국제법 위반,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이 사법주권을 행사해서 명확하게 확정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외교적 명제를 달더라도, 심지어 미국마저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친일이나 반일이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권을 침해한 불법적이었다, 그 불법성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원래 있었던 불법성을 대법원이 확정판결로 사법주권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65년도 대일청구권 협정 맺을 때 일본은 아무런 사실조사도 없었고 피해자 전수조사도 없었고 피해 규모에 대한 확인도 없으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이다’라는 외교적 표현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당시에 제대로 된 피해신고를 받거나 한 바가 없이 그걸 회피한 거지요. 그래서 포괄협상, 정치협상을 하고 끝내고 유보를 한 결과 2005년도에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유보돼 있다’ 이렇게 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도 그 기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추미애 위원 그런데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할 때 어땠습니까? 위안부 협상할 때 어떤 문구를 넣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넣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런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완전하고도 최종적이다’라고 대일청구권 협정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번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최종적이라고 대일청구권 협정을 아무리 우겨 본들 위안부 협상에서 또 한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었다’고 했으니까 논리 모순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추미애 위원 앞에서는 조약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협상을 하자고 한 것이고 그렇게 문서 없이 우기는 말을 또 한 번 더 한 것이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수혁 예,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일본 스스로가 논리 모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반인도적 국제법 위반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의 불법성이 어떤 외교행위를 하더라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고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정부를 강박하거나 서두르면 쾌락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만큼은 외교적 양보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중심주의 말씀하셨는데 국제법상 피해자중심주의는 어떤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인권침해 같은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해결 여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뿐만 아니라 완전한 배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국제법상 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그 불가양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강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원칙 아래에서 저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스탠드스틸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바마 정부가 축구를 하니까,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선불리 과거사 문제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국제사회에 다시 재론하지 말라. 소녀상을 철거한다’ 이런 이면 합의를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의 정치·경제와 과거에 풀지 못한 역사는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하원에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만도 못한 위안부 합의를 한 거예요. 정치·경제와 역사를 분리해서 연구과제 연구하면서 풀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자, 그리고 이것이 국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과거사를 제대로 정립한 다음에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국의 국민을 정치적으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선동하지 말자. 이런 정치·경제와 역사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입장을, 미국에도 중재 요청하면서 분명히 하고요. 오바마 정부처럼 트럼프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밤 나라 대추 나라 하지 않도록 하는 분리가 필요한 거지요.

다시 한번,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수용성인데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원칙, 완전한 배상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고 그것이 관철돼야 하는 것이고 법적 본질과 근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외교적 협상과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다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민봉 위원님께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배상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 무엇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2005년에 우리가 밝힌 바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 다시 말하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사할린 문제, 원폭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라고 그러면 이미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이 최종적이라고 한 것과 모순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동의하신 것 같은데?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금 추미애 위원님 말씀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이다, 일본의 해석으로 볼 때 스스로 모순이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유민봉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위안부 문제는 65년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유민봉 위원 다시 협상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영 외교부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 무 성	김 재 경	박 병 석	박 정
박 주 선	송 영 길	심 재 권	유 기 준
유 민 봉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정 현
정 병 국	정 양 석	정 진 석	천 정 배
추 미 애			

○청가 위원(4인)

김 부 겸	원 혜 영	윤 상 현	이 해 찬
-------	-------	-------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기 원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 1 차 관	조 세 영	
조 정 기 획 관	김 영 완	
유 럽 국 심 의 관	김 정 하	